

동물복지정책 간담회 기획안

우리 시대, 동물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존중 받지 못하고 착취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란 동물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열악한 사육환경이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고, 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는 인간 사회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지만, 생명경시 풍조는 자살과 정신질환, 사회적 지지대의 실종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서 미래를 약속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물을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는 동물복지정책간담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후 3시

장소 : 서울대공원 내 서울시 직영 반려동물입양센터

주최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

[간담회 개요]

◆ 사회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 인사말 : 김정숙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부인
임순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조희경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 주제 발표

1.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 서지화(변호사,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동물의 생명도 존엄함. 인간과 동물의 다름이 그들 생명의 가치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물을 대상이 아닌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
-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법적으로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인간이 다른 종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사회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도 될 수 없음.

2. 반려동물 판매업과 번식업 관리 강화,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 오순애(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는 2만이고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수는 500만에 달함.
- 반려동물 판매업 활성화 등의 이유로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이고, 유기동물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이 병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함.
-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 성장에 비해 산업, 제도 안에서 반려동물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 소모품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아 국민 정서에 상처를 주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생명 윤리 의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업과 번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지자체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시설과 관리 소홀, 관리동물을 육용으로 유통하는 등의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입찰제로 가장 적은 예산이 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사후 대처는 물론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는, 명실상부한 동물보호 센터가 돼야 함.

3. 사육동물의 복지 개선 / 이형주(팀장, 한국동물복지협회)

- 안내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특수견은 일생 동안 동물 고유의 본능을 억제당하며 인간의 복리를 위해 사육.
- 현재 마약탐지견 등 사육견이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은퇴 후 공혈견으로 기증되며, 훈련 탈락견은 안락사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 고발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사육견의 처우 개선과 은퇴 후 보호,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함.

4. 야생 동물 보호와 전시 동물의 복지 / 이항(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국토 개발로 야생동물 생활권 축소 및 로드킬 문제 발생.
- 서식지가 다른 야생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본능을 제약하지 않는 동물 전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나, 이로 인해 얻는 교육적, 상업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 동물 체험전 등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전시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는 동물 학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전시 시설 내에서 번식된 야생동물은 영세 동물 전시 업체에 거래되면서 종별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5. 고래 포획 금지 / 장하나(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2011년 서울시는 불법포획돼서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에 이용되던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방사를 결정.
- 2011년 7월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과학 조사 포경 계획을 발표해서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음. 이후 정부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발표함.
-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은 고래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혼획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혼획된 고래의 유통을 간소화하는 방안만 마련되고 있음. IWC 회원국 중 혼획율 1위라는 오명 벗고 멸종위기종인 고래류를 복원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고래류 포획 금지를 결정해야 함.

6. 사육곰 폐지 / 윤상훈(팀장, 녹색연합)

-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곰 사육은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 불법 채취, 부산물 불법 유통,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 탈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 반대하고 있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는 곰 사육 폐지 결의문 통과됨.
- 사육곰 불임수술 선행과 곰 사육 폐지 후 현존 사육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7. 자연재해, 환경재난 등 국가 재난 시 피해 동물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 이원창(국장,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소와 돼지 350만 마리를 살처분한 것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로 문제시될 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 기계와 전기 시설이 많은 공장식 축사는 대형 사고에 취약하며 사건사고 발생 시 동물의 폐죽음으로 이어짐.
- 연평도, 경북 구미 불산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이 발생할 때 동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고통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형사고 발생 시 동물재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인력 상시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탐방